

尹, 체코 공식 방문... '신규 원전 건설사업' 후속조치 나서

김건희 여사와 오는 19일 출국 체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넘어 전방위 협력관계 발전 방안 협의 정상회담서 외교·안보 집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박4일간 체코 공화국을 공식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후속조치의 성격이 가까워 보인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한-체코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후 9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호 차장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양국간 관계 강화를 위해 폭넓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체코 정상회담 후에는 공동기

자회견도 갖는다.

김 차장에 따르면 한-체코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안보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페트르 파벨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경제협력 이슈를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는 체코는 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일종의 의원집정부제를 채택

하고 있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대표성을,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경제·사회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저녁 양국 대표단과 정관계 주요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20일에는 파벨 대통령과 함께 대한상의-체코상의 및 체코 산업연맹이 공동주최하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이어 대표적 원전 설비 생산기업을 방문해 공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체코 의회 하원과 상원의장을 각각 접견하고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체코 의회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고 21일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이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원전동맹’이다. 김 차장은 “특히 이번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은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

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세일즈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뒤이은 브리핑을 통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이 내년에 최종계약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체코의 협조와 지지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순방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분야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분야)이 대거 동행해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원전생태계 모든 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전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브리핑에서 “원자력 분야는 기존 핵연료 연구는 물론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연구 개발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소재개발, 동위원소 생산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한동훈 “의료개혁 과정서 관계자의 상처주는 발언 있었다”

의료계 이견으로 당정협의외만 열려 韓 “의료계 단일대오 갖추기 어려워 野, 조건 걸지 말고 함께 출발해주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12일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왔던 정부 측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그간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상처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외에서 “그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부분에 유감을 표명



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상처주는 발언’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국회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듯한 ‘의새’ 발언 논란에 의료계의 반발을 샀고 라디오 방송에선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말해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과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 해법을 논의하는 협의체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의료계 참여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당정협의외만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와 먼저 협의체 출범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대한의사협회 등 대표성 있는 단체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한 대표는 지금은 해법 마련을 위해 대화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화 뿐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여·야·의·정 모두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말고, 대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에서 보셨겠지만,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라며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 다수 또

는 특정 단체의 참여를 협의체 출발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국 협의체의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조건을 걸지 말고 함께 출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막상 출범하려 하니 대한의사협회가 꼭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거나, 그렇게 전제조건을 걸면 협의체가 출발도 못하고 흐지부지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협의체를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불안감을 덜길 원한다면 특정 의료단체의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일단 협의체의 출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면서

“국회의장마저 여러가지 정치 표결을 미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집중하고 협의체에 집중하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외 후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단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곳이 여러 곳 있고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시작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며 “야당만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할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석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 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응급의료센터가 400명 정도의 의사, 간호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또, 연휴 기간 동안 8000여개 동네 병의원 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이재명 “다음 지선·대선 위해 당원중심 정당으로 바뀌야”

민주적 대중정당 중심에 시·도당 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시·도당 위원장들에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을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시·도당 위원장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들에게 “다음 지방선거도 잘 준비해야 하고, 그다음 대선도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이라며 민주당에 주어진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 지금 당장의 과제로 민주당의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국민주권국가의 당원 중심 정당으로,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확실하게 체질을 바꿔나가야 하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 중심에 민주당의 시·도당이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당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효능감을 느끼면서 당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들

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각 시·도당이 처한 상황들도 매우 서로 상이해서 ‘어떻게 서로 공존하고 또 협력해 가면서 전국 정당으로 민주당이 발전해 나갈까’라는 문 제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윤도현 기자 yunb0611@

민주당, 宇 ‘본회의 표결연기 요청’ 수용

(우원석 국회의장)

채상병·김건희 특검, 지역화폐법 연기 추석 의료대란 국민 걱정 해결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우원석 국회의장의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표결연기 요청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세 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15일 후(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15일 후에 재의결해야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전에 재표결 절차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선 오늘 본회의의 처리를 하는 것이 일정상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의원총회에서) 본회의의 처리를 19일로 미뤄도 괜찮을 것 같다”며 “추석 앞두고 국민들이 의료 대란을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일정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제3차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 진상조사가 담긴 ‘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지역화폐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전날(11일) 세 법을 여야의 쟁점 법안으로 보고 의료 대란 해결이 우선이라며 세 법의 본회의 표결을 19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도현 기자